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경제의 도전

The Challenges to Korean Economy in the Post-COVID-19 era

김동헌*

[국문요약]

COVID-19 팬데믹 충격은 세계 경제성장률의 급락을 초래하고 한국경제가 당면해왔던 경제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켰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등의 업력이 약화되고 산업간·기업간 충격의 편차가 커서 기업간·계층간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연착륙,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K-자형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디지털 경제 선도·2050 탄소중립·ESG 경영전략·국가 재정건전성 등의 도전들을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취약 계층의 생산적 지원, 규제개혁 및 혁신,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력충 민간 일자리 창출 강화, 저출산에 대한 통합적·생애주기적 접근, 공·사적 연금 강화, 균형적 에너지 전환정책, 혁신생태계 조성,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COVID-19 충격, 거시경제 안정성, K-자형 양극화

I. 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 19)은 이듬해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했다. 2021년 12월 초 기준, COVID-19은 전 세계 223개국에서 발생하고 약 2억6천4백만명의 확진자와 5백25만명의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2020년 COVID-19 팬데믹 충격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은 -3.3%로 급락하였고 한국경제도 -1% 성장률로 성장이 후퇴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율이 80%를 넘는 국가들조차 긴장과 우려를 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COVID-19 팬데믹 이전부터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과 같은 심각한 경제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Tel: +82-2-3290-2226, E-mail: dongkim@korea.ac.kr

조적 문제에 당면해 있었다. 그런데 COVID-19 팬데믹 충격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K-자형 양극화라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이슈를 확대시켰다. 전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가 확산하고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경제의 난제들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은 중차대한 과제이고 단기간에 정책적 해결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난제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충격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중기시각(mid-term view)으로 검토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경제가 직면하는 도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대한 적절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 19 충격으로 소비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업력 급락, 대면근로자 고용악화 등을 경험하면서 산업 및 기업 간 충격의 편차가 커졌다. 이로 인해 기업 및 계층 간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경제는 인플레이션 및 자산버블, 가계부채의 급증,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서 벗어나고 소상공인·자영업 등 피해·취약 계층의 지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치밀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K-자형 양극화 및 청년실업 등은 중요한 도전들이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선도, 2050 탄소중립, ESG 경영의 정착, 에너지 전환정책, 재정건전성 관리 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도전들이다. 이러한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일본과 같이 장기 경기침체 늪에 빠지고 미래세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중기시각 하에서 COVID-19 팬데믹 충격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경제의 도전들을 세심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IV장은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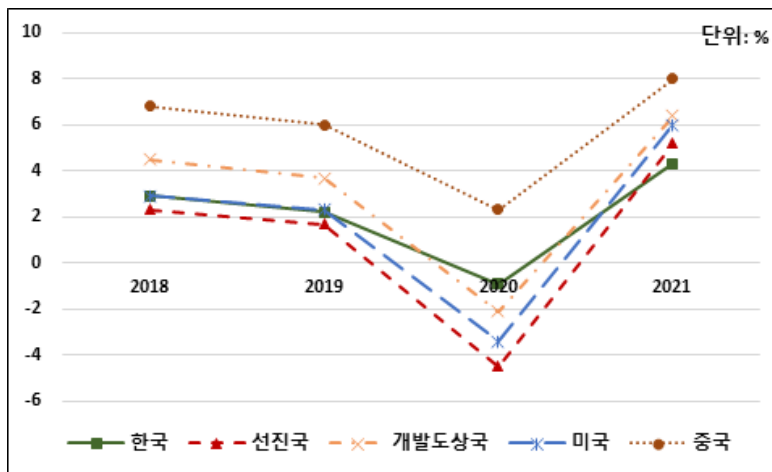
II. COVID-19 팬데믹 충격의 영향

1. 세계경제의 영향

COVID-19 충격은 2020년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불러일으켰다. 세계 각 국가들은 감염병 대유행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동제한을 강제하는 봉쇄(lockdown)와 감염병 대중전파를 막기 위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 등 행정명령과 같은 보건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신속하

게 공급하고 피해·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과거 경제위기와는 달리 COVID-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매우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각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취한 대응(정책)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경제 분야와 국가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림 1>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021년 4월에 발표한 2020년 선진국, 신흥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의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COVID-19 팬데믹 충격과
선진국·신흥국·한국의 경제성장률



자료: IMF (2021a)

2020년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 평균은 -4.7%를 기록한 반면 주요 신흥개도국 평균은 -2.2%로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높았다. 유로존 지역의 경제성장률 평균은 -6.6%로써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았다. 중국은 COVID-19 팬데믹 이전보다 성장률은 하락하였으나 2.3% 성장률을 달성하여 COVID-19 팬데믹 충격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난 유일한 국가들 중 하나였다. 한국경제는 -1% 성장률을 기록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 낙폭이 작았다. 주요 서방국가들 중 가장 경제성장률이 낮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11%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 영국이 -9.9%, 이탈리아 -8.9%, 프랑스 -8.2%, 독일 -4.9% 순이었다. 미국은 -3.5%, 일본은 -4.8% 달했다. 반면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인도가 -8%로 낮았고 브라질 -4.1%, 러시아 -3.1%였다.

<표 1> 2020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국가	경제성장률(%)	국가	경제성장률(%)
미국	-3.5	캐나다	-5.4
독일	-4.9	중국	2.3
프랑스	-8.2	인도	-8.0
이탈리아	-8.9	러시아	-3.1
영국	-9.9	브라질	-4.1
일본	-4.8	한국	-1.0

자료: IMF(2021a)

COVID-19 충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 전염병과 연계시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고 많은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주요 연구들로는 Barro, Ursua, & Weng (2020), Jorda, Singh, & Taylor (2020), Correia, Luck, & Verner (2020), Banerjee, Kharroubi & Lewrick (2020), Boissay, Rees, & Rungcharoenkitkul (2020), Boissay & Rungcharoenkitkul (2020), Brodeur, Gray, Islam, & Bhuiyan (2021), Kozlowski, Veldkamp & Venkateswaran (2020), McKibbin and Fernando (2020), Ma, Rogers & Zhou (2020), Barrett et. al (2021), Rungcharoenkitkul (2021) 등을 들 수 있다¹⁾. Barro et al. (2020)은 1918년 스페인독감(1918 influenza)이 총생산의 약 6-8% 손실을 초래했음을 보여주었고 Correia et al. (2020)은 제조업 고용이 약 20%가 감소하는 추정결과를 보여주었다. Jorda et al. (2020)은 14세기 이후 유럽에서 12번에 달하는 대유행 전염병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전염병 이후 수 십년 동안 실질금리가 낮았는데 이는 예비적 동기의 높은 저축과 낮은 투자로 자연률 수준 이자율(natural interest rates)이 낮게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Ma et. al. (2020)은 COVID-19 대유행 충격이 발생하여 총생산이 감소하였고 이후 총생산의 반등(bounce-back)은 신속하지만 충격 이전 수준보다 낮음을 보여주었다.

Barret et. al (2021)은 1957년-2019년 기간 동안 세계 115개 국가로부터 경기 불황(recession)과 관련된 586회 표본을 활용하여 경기 불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경기 불황이 GDP의 공급측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피해가 어떤 경로로 작동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COVID-19 팬데믹 충격이 총생산의 급락을 초래했던 과거 경기 후퇴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경기후퇴의 경·중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국가들마다 COVID-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시간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단기 경기후퇴(1년 이내)와 중기 경기후퇴(1년 이상 지속)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위기의 유형도 대유행과 전염병(pandemic & epidemic), 금융위기(financial crisis),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그리고 폭력적 갈등 사태(violent conflict outbreaks)로 구분하였다. 그

1) COVID-19 팬데믹 충격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연구에 대해서는 Brodeur et al. (2021)을 참고하길 바란다.

러나 모든 유형의 경기후퇴는 위기의 동시발생에 따른 상호작용을 감안한 동일한 회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통합된 틀(unified framework)안에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COVID-19의 상흔(scarring)은 상당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COVID-19 충격 후 금융안정성은 과거 금융위기 상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경기후퇴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COVID-19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경로는 이전 경기후퇴의 경우와 상이하였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COVID-19 팬데믹 후 중기적 총생산의 손실은 상당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과 국가경제마다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추정에 따르면 COVID-19 충격으로부터 글로벌 경기회복은 보통 때보다 더 빠르지만 2024년 세계 총생산은 팬데믹 이전의 전망치보다 약 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국제사회는 고도로 글로벌화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팬데믹은 과거보다 발병확률도 더 높고 잠재적으로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 <표 2>는 2020년 3월 COVID-19 팬데믹 충격의 영향을 추정한 주요 연구들을 보여주고 있다. Rungcharoenkitkul (2021)은 COVID-19 팬데믹의 중요하고 분명한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대규모 봉쇄정책(large-scale lockdown)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과거 선행이 없는 보건정책 대응은 이전 주요 팬데믹에서 나타났던 막대한 사망자를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인데 동시에 경제를 거의 마비상태로 몰고간 부수적인 피해도 발생시켰다. 이번 COVID-19 팬데믹 경제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경기후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예상치 못한 충격이라기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표 2> COVID-19 팬데믹 충격의 영향에 대한 주요 연구

연구 논문	방법론	경제적 손실
McKibbin & Fernando (2020)	DSGE 모형과 CGE 모형을 결합한 추정	일반 전염병의 충격은 연간 글로벌 GDP의 0.3-2.2% 손실이 있는 반면 팬데믹 충격은 2.5-11% 손실이 발생함
OECD (2020a)	준구조적(semi-structural) 모형 추정	기준치모형의 경우, 연간 글로벌 GDP 성장률은 0.5-1.5%p 하락하고 극심할 경우, 국내총수요는 2% 하락하며 위험프리미엄은 50bps 상승함
Gourinchas (2020)	예시적 추산(illustrative calculations)	만약 1개월 동안 경제가 50% 폐쇄되고 2개월 동안 25% 폐쇄되면 연간 GDP 성장률은 6.5%p가 하락함
Saez & Zucman (2020)	예시적 추산 (illustrative calculations)	미국경제가 폐쇄되면 총생산의 30% 손실이 발생하고 1분기 동안 폐쇄될 경우, GDP 성장률은 7.5%p 하락
OECD (2020b)	부문별 생산과 소비 분석	경제가 폐쇄되면 주요 선진국에서 GDP의 20-25% 손실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 폐쇄될 경우, 연간 GDP 성장률은 2%p 하락
Gormsen & Koijen (2020)	배당선물에 대한 고빈도 자료 추정	미국과 EU 연간 성장률은 각각 2%p 및 3%p 하락함

출처: Rungcharoenkitkul (2021)으로부터 재구성

Rungcharoenkitkul (2021)은 과거 대유행 및 전염병 사례와 비교하여 COVID-19 충격의 영향에 대한 수량적 분석과 영향의 경로를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COVID-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Rungcharoenkitkul (2021)은 세 가지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매우 파괴적인 팬데믹이 가능하고 이러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큰 희생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재발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잘 준비된 컨틴전시 행동지침 뿐만 아니라 닥쳐올 위험들을 곧바로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봉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혹독한 봉쇄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 자원은 제재가 반복되면서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봉쇄와 같은 최후 수단은 전체 전략의 한 부분으로써 덜 파괴적인 방안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가속하지만 목표가 명시된 정책들은 무차별적 대응수단보다 훨씬 비용이 덜 소모된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기회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엄격한 자가격리 시행, 국경 제한, 광범위한 역학 조사 등과 같은 정책은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한국경제의 영향

한국경제는 2020년 경제성장률이 -1%로써 경제성장이 후퇴하였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 낙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강두용 외(2021) 추정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 이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 대비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3.7%에 달했고 2020년 취업자 증가수는 -21만9천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3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수 23만8천명 대비 고용은 45만7천명이 감소하여 한국경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주요 부문별 충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주요 부문별 충격

분류	부문	추세(%)	2020(%)	하락 폭 (%포인트)
지출항목별	민간소비	2.5	-4.9	-7.4
	설비투자	2.6	6.8	4.2
	건설투자	3.2	-0.1	-3.4
	수출	2.1	-2.5	-4.6
	수입	3.4	-3.8	-7.2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2.4	-1.0	-3.4
	서비스업	3.1	-1.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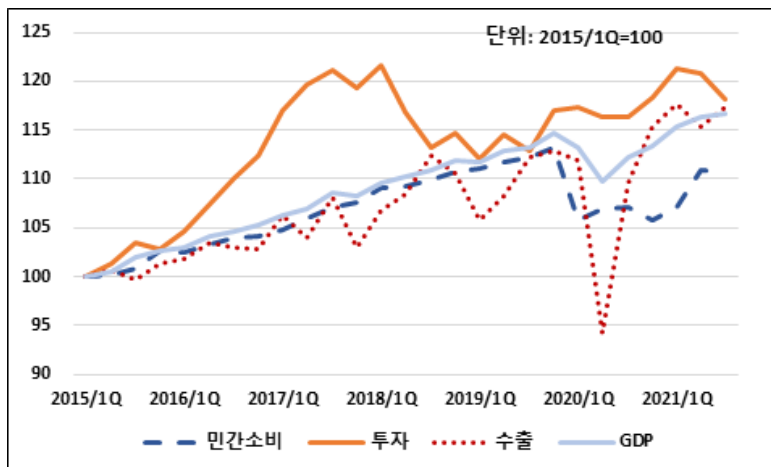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강두용 외(2021)

주: 지출항목별 및 대분류 산업별 추세는 이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임.

설비투자를 제외한 모든 지출 부문은 2020년 모두 하락하였는데 민간소비 성장률은 -5%에 달해 과거 추세치 대비 7%포인트 이상 하락하여 지출항목 중 낙폭이 가장 컸다. 다만 강두용 외(2021)은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단기적인 현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5년간 추세치 대비 2020년도 하락폭은 3.4%포인트인 반면 서비스업 성장률하락폭은 4.3%포인트로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의 부진 폭이 더 컸다.

강두용 외(2021)은 COVID-19 팬데믹 충격의 크기와 과거 주요 위기를 비교하였다²⁾. 민간소비와 고용 충격 측면에서 보면 COVID-19 팬데믹 충격이 외환위기 충격 다음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고 성장률 낙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나 2차 유가충격위기 시보다 그 하락폭이 낮았다. COVID-19 팬데믹 감염병 위협의 특성상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이들 업종의 고용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아 GDP 성장률 하락폭에 비해 소비와 고용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GDP 구성 항목의 기간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강두용 외(2021)

주: 2015년 1분기 = 100(계절조정자료)으로 환산하고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실질 변수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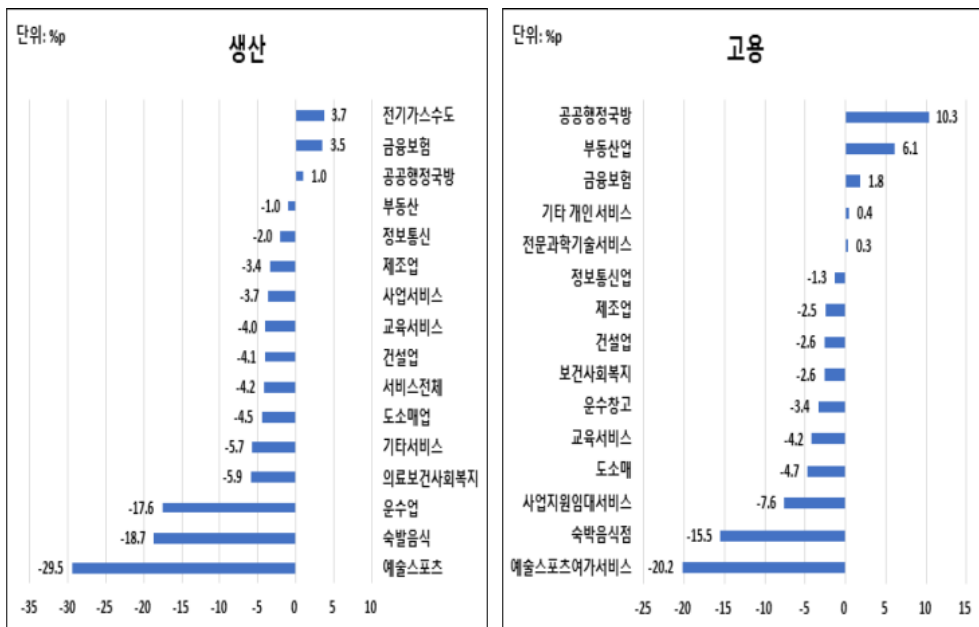
2020년-2021년 1분기 동안 COVID-19 팬데믹 충격의 추이(그림 2)를 살펴보면 GDP 성장률은 2020년에 저점을 보인 후 점차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2020년 1분기

2) 강두용 외(2021)은 과거 주요 위기로 1974-75년 1차 유가충격, 1979-80년 2차 유가충격,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비교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에 큰 폭으로 하락하여 거의 1년 동안 위축되었다가 2021년 1분기부터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은 2020년 1분기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신속히 반등하여 이전 성장 추세를 회복하였다. 다행히도 투자위축은 거의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강두용 외(2021)은 COVID-19 팬데믹 충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충격의 산업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감염병 위험이 일부 산업에 집중적인 충격을 미치는 반면, 감염병 위험으로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분류된 비농림부문 산업의 경우, COVID-19 팬데믹 충격으로 인한 비농림 업종 성장률의 분산이 이전 주요 위기별 비농림 업종 성장률 분산의 평균보다 약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산업별로 생산과 고용 부문의 충격을 살펴보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숙박음식, 운수업 등 감염병 위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면형 서비스업은 큰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림 3>은 주요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주요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친 영향



자료: 한국은행 ECOS, 고용노동부, 강두용 외(2021)

예술스포츠업의 생산증가율은 30%포인트가 넘게 급락하였고 예술스포츠업과 음식·숙박업은 고용이 전년 대비 각각 12.2%와 10.8%가 하락하였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등은 수요 폭발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호황을 누렸다. 2020년도 인터넷 쇼핑과 반도체 판매증가율은 각각 31%와 23%에 달했다.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부

문의 영향을 살펴보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업종은 수출이 급감한 반면 컴퓨터, 의약품, 가전제품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충격의 산업간 편차로 인해 기업실적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예술스포츠, 운수보관업, 음식숙박업의 매출은 급감한 반면 바이오(의약품)와 IT기업은 매출 및 영업이익률도 높아졌다. 한국경제연구원(2021c) 분석에 따르면 상장사 매출액 5분위 배율은 2019년 266.6배에서 2020년 304.9배로 확대되었고 상장기업의 25.1%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간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³⁾. K-자형 양극화 현상은 업종별로도 뚜렷하여 의료·제약 및 전기·전자업종은 2020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25.7% 및 64% 급증한 반면, 기계 및 사업서비스 업종은 영업이익이 각각 72.8% 및 39.1% 줄어들었다.

K-자형 양극화 현상은 가계부문에서도 심화되었다. 가계부채는 2021년 1/4분기말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늘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71.5%로 전년 동기대비 11.4%포인트 상승하는 등 가계채무 상환부담이 크게 확대되었다(한국은행 2021). 소득 1분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급감한 반면 5분위 근로소득은 거의 변화가 없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커지고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은 소비위축과 성장률의 급락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켜 K-자형 양극화라는 경제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이슈 중의 하나로 거론된 잠재성장률 하락도 코로나19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석 외(2021) 추정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COVID-19 이전 2010년부터 생산성이 급속히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 3.2%, 2016-2020년 2.8%으로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충격으로 잠재성장률이 2.2%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⁴⁾.

COVID-19 팬데믹 충격의 영향에 대한 분석들과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감염병이 세계 모든 나라에 확산되면서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적 영향의 크기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⁵⁾. 이러한 차이의 배후에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량과 정책효과의 차이, 그리고 각 국가들의 산업 및 경제구조의 차이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각 국가들의 경제적 충격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충격은

3) 상장사 매출액 5분위 배율은 매출액 최상위 20%와 최하위 20%간 평균 매출액 비율이다.

4) COVID-19 팬데믹 충격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였다고 보는 시각에는 견해 차이가 있다. 정원석 외(2021)은 감염병 위기가 일시적 충격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경제 기초 체력을 약화시켜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한 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코로나 충격이 자본의 물리적인 파괴나 노동력의 급격한 손실을 유발하지 않아 잠재성장률은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5) 윤성훈(2021)은 코로나19 충격과 국가체제, 각국 금융당국의 대응,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 재정위기 중간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덜하였지만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K-자형 양극화 심화 및 잠재성장률 하락은 향후 한국경제 발전에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III. 포스트코로나 한국경제의 도전

COVID-19 팬데믹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백신개발 및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속히 백신개발을 추진하였고 많은 국가들의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경제회복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특징상 변이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생겨 백신접종완료률이 70%를 넘은 국가들마저 재감염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해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⁶⁾. 한국도 2021년 11월 초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 방역단계를 완화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위중증환자들의 급증으로 방역강화와 경제활동 재개 간 갈등으로 긴장과 고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 충격이 그동안 한국경제의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난제들을 더욱 악화시킨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도전들을 단기와 중·장기적 시계하에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거시경제의 연착륙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경제의 단기적 과제 중 최우선은 물가안정과 고용회복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이다. 세계 경제 중 가장 급속한 경제회복을 보이는 국가들 중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2021년 5월부터 5%를 넘었고 11월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8% 급등하여 거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2년 상반기에 테이퍼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인플레이션 급등은 긴축시계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미국경제가 금리인상을 조기에 단행하면 국제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는 한국에 유입된 해외자본들의 신속한 유출을 초래한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달러화 급등은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인상 국면과 멀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압박하고 있

6) 2021년 11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려변이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명명하였다.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의 돌연변이를 가져 델타 변이바이러스보다 단백질 돌연변이가 2배로 높아 인체 침투 가능성이 커져 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공급망 균열이 잠재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경제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7%로 10년 만에 가장 높아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이는 이미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에게 추가적인 금리인상 요구로 작용한다. 문제는 전 국민 취업자들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COVID-19 충격에 따른 피해에서 아직 업력을 회복하지 못해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피해·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긴축과 정부재정지원이 정책효과상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정책결정자들간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요구된다.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한 또 다른 이슈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등의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산버블을 일으키고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만약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고 중국 형사 사태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더욱 가시화된다면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79% 급등하였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중산층의 주택 소유를 저해하여 주거 인프라를 악화시키고 경제활동의 터전을 불안하게 한다. 박의환·김동현(2021)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포스트코로나 한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매우 주요한 과제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가 기본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서민 주거복지 지원에 집중하여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의 조율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주거시스템이 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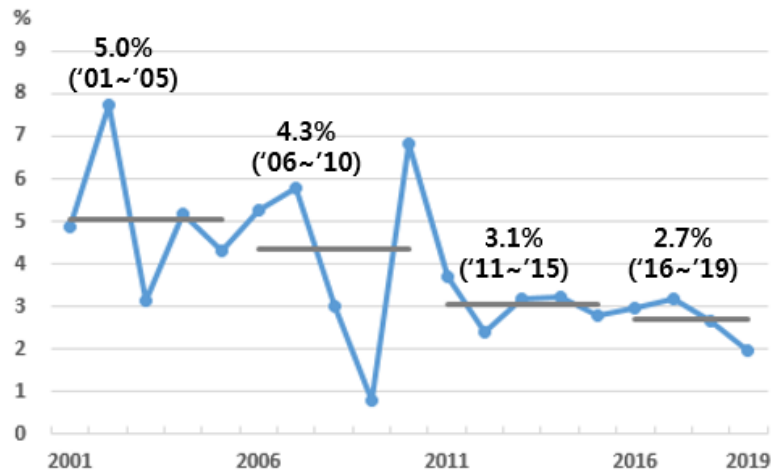
글로벌 환경에서 거시경제 안정성에 어려움을 주는 이슈는 미·중 갈등과 한·일 갈등이다. 한국경제는 근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에 의한 성장이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일 갈등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조속히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갈등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제활력 회복

COVID-19 팬데믹 이전부터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동반하락을 경험해 왔다.

7) 박의환·김동현(2021)에 따르면, 서울은 ‘슈퍼스타’도시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탄력성을 높이고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에 버금가는 대체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림 4>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2001년 - 2019년



자료: OECD, 한국경제연구원(2020a)

한국경제연구원(2020a) 추정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년 5.4%에서 2019년 2.7%로 반토막이 났으며 실제GDP가 2013년 이후 7년째 잠재GDP를 밑돌아 경제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2001년-2019년 기간 동안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1년-2005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5%에서 2016년-2019년 2.7%로 크게 낮아졌으며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 중 5번째로 성장률 하락폭이 컸다. 한국경제연구원(2019)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생산성 하락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2.3%로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도 2000년대 106.1%에서 2010년대 76.8%로 하락하였다.

정원석 외(2021)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COVID-19 팬데믹 충격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의 고용사정 악화와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을 초래하였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됨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도 더욱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코로나 충격 이전 추정에서는 2020년 잠재성장률이 2.6%였으나 코로나 충격 이후 추정에서는 2.2%로 하락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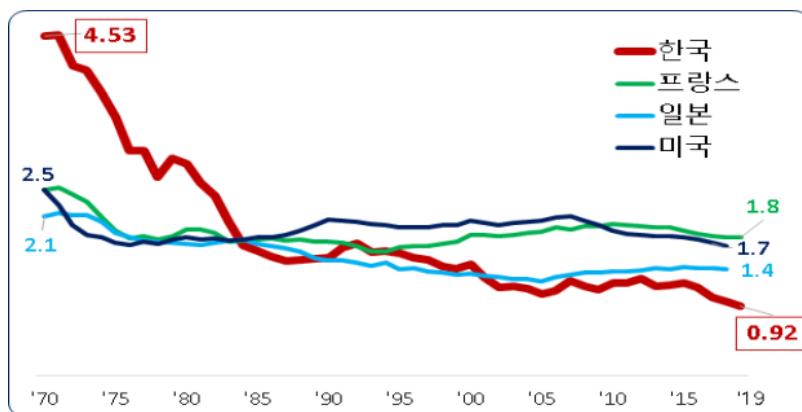
COVID-19 팬데믹 충격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는 주요한 이슈는 아니다. 왜냐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은 그 이전부터 심각히 진행되어 왔던 한국경제의 주요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을 멈추고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가 활력을 잃고 기초체력이 약화되어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이론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측면은 피할 수 없지만 한국은 그 둔화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배후에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활력 저하에 따른 총수요의 위축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신속하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도 일본경제와 같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 서비스 창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역동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3.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OECD 통계(OECD.Stat)에 따르면 한국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하였고 이는 OECD 37개 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⁸⁾. 또한 동 기간 동안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 국 중 가장 빨랐다⁹⁾. 노인빈곤율도 2018년 기준 43.4%에 달해 OECD 평균 14.3%의 약 3배이고 OECD 국가들 중 1위이다¹⁰⁾. 한국경제연구원(2021b) 분석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25명이 감소할 경우, 성장률은 0.9%포인트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 1%포인트 상승시 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잠식시키는지를 수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5>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OECD.Stat, 한국경제연구원(2021b)

8)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9) 고령화비율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10)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잠재 성장력 잠식 뿐만 아니라, 재정여력 약화, 노인빈곤 문제, 연금 기능 약화, 세대간 갈등과 사회범죄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책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그 대책을 마련하고 풀어내야 할 중차대한 도전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약 1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20년도에도 4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엔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교육·육아·주거·결혼·청년취업 등 생애주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한쪽 측면만을 가지고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출산과 관련된 정책부터 출산을 지원하고 교육과 양육, 그리고 부모의 고용을 지원하는 통합적 시각에서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유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적으로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고령화 문제는 노령층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재정여력도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기능을 강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확대하여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 노령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정년연장이나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하고 직무·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양질의 고령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사회 통합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고 유엔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안에 포용적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국내 및 국가간 불평등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대 초반까지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어 오다가 2015년부터 다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OVID-19 팬데믹 충격이 국가들 간 뿐만 아니라 경제내 주체들 간 격차를 크게 심화시키면서 “K-자형 양극화” 현상은 경제의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신관호·신동균(2013) 과 박의환·김동헌(2021)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화의 진전, 기술진보, 금융발전 정도, 주택가격 등이 제시되고 있다. COVID-19 충격은 경제주체들 중 특정 피해·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여행숙박스포츠업·대면근로자·일용근로자 등)에 훨씬 더 영향을 준 반면에 IT·바이오·온라인 중심 기업 들에게는 수익 창출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계층간·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취약 계층의 업력 회복과 소득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되 적정 시점에서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과 관련한 또 하나의 이슈는 청년실업이다. 한국경제연구원(2020b)에 따르면, 2009년-2019년 동안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평균이 4.4%포인트 감소한 반면 한국은 0.9%포인트 증가하였고 2019년 OECD 37개 국 중 청년 경제활동참가율과 청년고용률은 각각 47.8% 및 43.5%로써 34위와 32위로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2021) 분석에서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 시 잠재성장률은 0.2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청년실업률은 성장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난이 장기화되면 인적자본 축적이 훼손되고 이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득 불평등 심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이중적 구조를 무너뜨리고 기업들의 청년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민간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청년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과감한 기업규제개혁을 추진하고 특히 산업간 장벽을 무너뜨려 창의적인 비즈니스 영역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5. 중·장기적 도전

2050 탄소중립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가장 현실로 다가오는 이슈이다. 왜냐하면 COVID-19 팬데믹조차 글로벌위명과 관련되어 있고 글로벌위명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길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목표를 의결하였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부담과 도전이다. 탄소중립은 국민 삶에 필수적인 길이지만 실제 이를 구현하는 과정은 각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큰 충격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교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한국경제에 맞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에너지 정책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결되어 있고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원전·석탄·LNG·신재생 등 에너지 전원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정책기조와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이슈는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다수 기업들은 ESG 경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거스리는 기업은 곧바로 경쟁에서 도태되게 된다. ESG

경영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은 기업들에게 적지않은 도전이다. ESG 경영의 특성은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공공기관들도 이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서 국가 전방위적으로 ESG 경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공적 영역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중·장기적 도전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핀테크 및 빅테크, 플랫폼 베이스 비즈니스, 빅데이터와 AI, 메타버스, CASE, 자율주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경제 선도이다. 디지털 세계는 변화가 빠르고 니즈와 수요도 급변하기 때문에 융합된 시각과 사고의 유연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영역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한다.

정부 재정건전성 관리도 중요한 중·장기적 과제이다. 현 상황에서는 피해·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보다는 효과적인 지원에 집중을 해야 하겠지만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된 관리가 필요하다. 2020년 국가부채는 1조985조원으로 명목GDP보다 더 높았다. IMF (2021b)는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15.4%포인트로 가장 빠르고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말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약 51.3%로 선진 35개국 평균 121.6%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지만 채무비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하게 빨리 늘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현재,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재정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IV. 요약 및 결론

COVID-19 팬데믹 이전부터 한국경제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의 하락, 부동산 가격의 급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실업을 증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당면해왔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COVID-19 팬데믹 충격의 영향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간략히 검토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여전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여 감염이 진행되고 있고 세계경제는 코로나 충격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충격의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다만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이후 2021년 백신접종이 가시화되는 중반까지를 고려하여 중기시계로 코로나 충격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3%로 급락하였고 한국경제도 -1%로 역성장을 경험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폭은 과거 외환위기 및 2차 유가파동위기보다 작았고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과 유사했다. 감염병 충격의 특성상 소비위축과 대면위주 산업에서 생산과 고용의 급감을 경험한 반면 IT·바이오·온라인 관련 산업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다. 이로 인해 산업 및 기업 간 충격의 편차가 컸다. 이는 한국경제에 기업들 간 그리고 계층들 간 K-자형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COVID-19 팬데믹 충격은 그 이전에 한국경제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켰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시급한 이슈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거시경제의 연착륙이다.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풀린 과도한 유동성과 공급망의 균열, 원자재 및 유가의 급등 등은 지속적이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에 따라 조기 통화긴축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에 소상공인·자영업·대면근로자 등의 피해·취약 계층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두 정책이 충돌하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 및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중국 형다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촉발시키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금융안정화 정책이 요구된다.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 및 한·일 갈등이 한국 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성장엔진은 꺼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경제도 머지않아 일본경제가 걸어온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 서비스 창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역동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성장력 잠식 뿐만 아니라, 재정여력 약화, 노인빈곤 문제, 연금 기능 약화, 세대간 갈등과 사회범죄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책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육아·주거·결혼·청년취업 등 생애주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공적 연금 및 사적연금 기능을 강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확대하여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COVID-19 충격은 K-자형 양극화의 심화를 가속화시켰다. 정부는 피해·취약 계층의 업력 회복과 소득보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실업난의 장기화는 인적자본 축적의 훼손을 가져오고 이는 잠재성장률의 하락 및 소득불평등 심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완화 및 기업들의 청년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에너지 전환정책, 민간기업의 효과적인 ESG 경영 추진 및 공공 인프라 지원,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한 건전성 관리 등은 한국경제 발전에 중차대하면서도 쉽지 않은 중·장기적 도전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보다 치밀하고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이러한 도전을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COVID-19 충격보다 더 큰 경제 쓰나미가 몰려올 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강두용 · 민성환 · 박성근(2021. 4. 22),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 중간평가,” KIET 산업경제.
- 박의환 · 김동현(2021), “주택가격과 소득불평등 간 동태적 관계 분석,” 제110차 한국경제의 분석 발표 논문.
- 신관호 · 신동균(2013), “금융발전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금융연구』, 32(3), 63-100.
- 윤성훈(2021. 7), “코로나19 충격과 세계경제,” 보험연구원 이슈보고서.
- 정원석 · 장준호 · 김철주(2021),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BOK 이슈노트』 2021-22, 한국은행.
- 한국경제연구원(2019),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생산성 증가대책 필요,” KERI 연구보고자료.
- 한국경제연구원(2020a), “韓 경제성장률 ·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가팔라,” KERI 연구보고자료.
- 한국경제연구원(2020b), “청년실업률, 10년간 OECD 4.4%p 감소, 한국은 0.9%p 증가,” KERI 연구보고자료.
- 한국경제연구원(2021a), “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르는데 노인빈곤율은 이미 OECD 1위,” KERI 연구보고자료.
- 한국경제연구원(2021b), “한국, 연평균 저출산 · 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KERI 연구보고자료.
- 한국경제연구원(2021c), “코로나 1년, 국내기업 K-자형 양극화 뚜렷,” KERI 연구보고자료.
- 한국은행(2021. 6), “금융안정보고서연구,” 서울, 한국은행.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 Banerjee, R., E. Kharroubi, and U. Lewrick(2020), “Bankruptcies, unemployment and reallocation from Covid-19,” *BIS Bulletin*, 31.
- Barrett, P., S. Das, G. Magistretti, E. Pugacheva, and P. Wingender(2021), “After-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Prospects for Medium-Term Economic Damage,” *IMF Working Paper*, WP/21/203.
- Barro, R., J. Ursua, and J. Weng(2020), “The coronavirus and the Great Influenza Pandemic: Lessons from the ‘Spanish flu’ for the coronavirus’ potential effects on mortality and economic activity,” *NBER Working Papers*, 26866,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oissay, F., D. Rees, and P. Rungcharoenkitkul(2020), “Macroeconomic effects of Covid-19: an early review,” *BIS Bulletin*, 7.
- Brodeur, A., D. Gray, A. Islam, and S. Bhuiyan(2021), “A literature review of the economics of Covid-19,”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5(4), 1007-1044.
- Correia, S., S. Luck, and E. Verner(2020), “Pandemics depress the econom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do not: evidence from the 1918 flu,”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561560> or <http://dx.doi.org/10.2139/ssrn.3561560>
- Gormsen, N. J. and R. S. J. Koijen(2020), “Coronavirus: Impact on stock prices and growth expectations,” *The Review of Asset Pricing Studies*, 10(4), 574-597.
- Gourinchas, P. O.(2020), “Flattening the pandemic and recession curves,” in R. Baldwin and B.W. di Mauro ed.,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CEPR Press, 31-39.
- IMF(2021a),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 IMF(2021b), “Fiscal Monitor, October 2021”.
- Jorda, O., S. Singh, and A. Taylor(2020), “Longer-run economic consequences of pandemics,” *NBER Working Papers*, 26934,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ozlowski, J., L. Veldkamp, and V. Venkateswaran(2020), “Scarring body and mind: The long-term belief-scarring effects of Covid-19,” *NBER Working Paper*, 27439,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a, C., J. Rogers and S. Zhou(2020),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Effects of 21st Century Pandemics and Epidemics,” *Covid Economics*, 5, 56-78.
- McKibbin, W. and R. Fernando(2020), “The global macroeconomic impacts of Covid-19: seven scenarios,” *CAMA Working Paper*, 19.
- OECD(2020a),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 OECD(2020b), “Evaluating the initial impact of Covid containment measures on activity,” *Tackling Coronavirus (COVID-19)*.
- OECD.Stat, <https://stats.oecd.org/>
- Rungcharoenkitkul, P.(2021), “Macroeconomic effects of Covid-19: a mid-term review,” *BIS Working Papers*, No. 959.
- Saez, E. and G. Zucman(2020), “Keeping business alive: the government will pay,” *Social Europe*, March 2020.